

2025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재외동포청 소관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도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예산안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2. 재외동포청 소관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9. 2.

2. 회부일자 : 2024. 9. 3.

3.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11. 12.)

- 상정, 토론, 수정의결

□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13.)

- 수정의결

나. 재외동포청 소관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7.)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4. 11. 11.)

- 상정, 토론, 수정의결

□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 11. 13.)

- 수정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전 문 위 원 김 사 우

I. 202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개요

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00만원 증액되어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357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9,000만원(2.3%) 증가하였음.

<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
세 입	5	5	13	8	160
세 출	34,974	34,974	35,764	790	2.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세입 예산안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조직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운영비, 사업비)의 이자 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과오지급금 회수, 급여 환급금, 정부구매카드 결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 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전년보다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세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관	항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 감		비 고
		본예산 (A)	추경		(B-A)	%	
소관 합계		5	5	13	8	160	
기타 이자 수입 및 재산 수입	기타재산 수입	-	-		-	-	
	기타재산 이자수입	3	3	3	-	-	o 지역회의·협의회에 지 급하는 국고보조금(운 영비·사업비) 이자 수 입
	소계	3	3	3	-	-	
기타 경상 이전 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2	2	10	8	400	o 과오지급금 회수, 급여 환급금, 정부구매카드 결 제 취소에 따른 수수료 회 수 등
	소계	2	2	10	8	4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은 357억 6,4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349억 7,400만원 대비 2.3%인 7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음.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024년 70억 8,200만원 대비 0.6%인 4,500만원, 기본경비는 2024년 19억 500만원 대비 0.5%인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도 2024년 259억 8,700만원 대비 2.8%인 7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세출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합 계	32,907	34,974	34,974	35,764	790	2.3
인 건 비	6,185	7,082	7,082	7,127	45	0.6
기 본 경 비	1,720	1,905	1,905	1,915	10	0.5
주 요 사 업 비	25,002	25,987	25,987	26,722	735	2.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출예산안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71억 2,7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19.9%, 기본경비는 19억 1,5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5.4%, 주요 사업비는 267억 2,2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74.7%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사업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은 전년 대비 4억 7,600만원 감액(△10.5%)된 40억 5,400만원, ‘정보화사업’

은 전년 대비 2,300만원(4.9%) 감액된 4억 5,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고,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2024년과 동일하게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2억 2,000만원(5.9%) 증액된 217억 7,200만원, '시설관리'는 전년 대비 1,400만원(3.6%) 증액된 4억 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합 계	17,250	25,987	25,987	26,722	735	2.8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4,198	4,530	4,530	4,054	△476	△10.5
○ 자문회의 운영	4,198	4,530	4,530	4,054	△476	△10.5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6	37	37	37	-	-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6	37	37	37	-	-
정보화사업	421	474	474	451	△23	△4.9
○ 정보화사업 추진	421	474	474	451	△23	△4.9
지역협의회 활동 지원	12,272	20,552	20,552	21,772	1,220	5.9
○ 자문위원 역량강화	4,883	2,589	2,589	2,359	△230	△8.9
○ 지역협의회 운영	375	12,265	12,265	13,239	974	7.9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375	5,698	5,698	6,174	476	8.4
시설관리	323	394	394	408	14	3.6
○ 청사관리 운영	323	394	394	408	14	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주요 검토의견 요약

(1)‘국내 출범회의’ 사업(20억 4,100만원)과 관련하여 해외 자문위원 초청예산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예정된 제22기 국내 출범회의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2)‘자문회의 구성’ 사업(3억 400만원)과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자문위원의 수를 7천명 이상으로 하한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1981년 출범 당시 자문위원 8,919명에서 제21기 21,984명으로 위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적정 자문위원 수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적정 자문위원 규모의 검토 및 구체적인 위촉 계획 수립, 사무처장 추천권의 조정 등을 통해 자문위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에 있어서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해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한 균형있는 위촉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3)‘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2억 5,000만원)과 관련하여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경비가 직책수행경비(250-02)와 기타보전금(310-04)으로 나누어 집행되고 있는 바, 자문위원은 직제에 의한 공적인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민간인 신분에 맞게 적정 예산 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4)‘여성·청년위원 역량지원’ 사업(5억 9,100만원)과 관련하여 청년위원

역량지원 예산(1억 8,000만원)이 유지된 반면 여성위원 역량지원에서 일부 감액 편성(1억 4,600만원)된 바, 제21기 여성위원 수(6,414명)가 청년위원 수(4,952명)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8억 4,000만원)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이북5도위원회)와 협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주평통 지역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탈북민 정착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Ⅱ. 2025년도 예산안 사업별 검토

1. 자문회의 운영

‘자문회의 운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규정된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분석 등을 통하여 의장인 대통령에게 실효성 있는 자문과 건의를 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45억 3,000만원 대비 10.5%인 4억 7,600만원이 감액된 40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자문회의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자문회의 운영	4,198	4,530	4,530	4,054	△476	△10.5
-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765	519	519	578	59	11.4
-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35	253	253	242	△11	△4.3
-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1,996	2,869	2,869	2,041	△828	△28.9
- 자문회의 구성	301	-	-	304	304	순증
- 자문위원 일반지원	186	157	157	157	-	-
- 간부위원 활동지원	237	250	250	250	-	-
- 직능별 정책회의	184	182	182	182	-	-
- 지역 운영위원회	294	300	300	30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문위원 임기(2년) 만료에 따른 제22기 자문위원 위촉으로 ‘자문회의 구성’에 3억 400만원,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예산이 격년사업인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편성으로 5,900만원 증액된 반면, 제22기 출범에 따라 격년 회의방식 변경¹⁾으로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예산이 8억 2,800만원,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이 수시 여론분석 횟수 조정 등으로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임기(2년)에 따라 격년제로 회의방식을 변경[(2023년) 출범회의 → (2024년) 지역회의 → (2025년) 출범회의]하고 있는데, 자문위원이 구성되는 해(2025년)에는 국내의 경우 제22기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전체회의로 열리고, 해외의 경우 각 해외 협의회별 현지 출범회의가 개최되는데 비하여, 출범회의가 없는 연도(2024년)에는 국내의 경우 18개 시·도별 지역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자문위원은 국내로 초청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은 자문회의의 운영과 통일정책 건의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법정위원회²⁾인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장에 대한 정책 자문과 건의안을 마련하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5억 1,900만원 대비 11.4%인 5,900만원이 증액된 5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주요 이유는 격년으로 개최하는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예산 6,10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2025년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765	519	519	578	+59	10.2
· 운영위원회 운영	48	45	45	44	△1	△2.3
· 상임위원회 운영	227	94	94	155	61	39.4
· 정책건의 보고 및 분과위원회 운영	370	338	338	336	△2	△0.6
· 정책포럼	20	17	17	18	1	5.6
· 자문건의 기반시설 사업	100	25	25	25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운영(분기별 1회) 4,400만원, 상

2) 자문회의 법정위원회

구 분	소 집	대 상	결과 보고	개최 주기
운영위원회(법 제19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50명)	의장	분기별
상임위원회(법 제18조)	상임위원장	상임위원(300~500명)	의장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법 제18조)	분과위원장(상임위원장 승인)	분과위원(9개×55명 내외)	의장	분기별

임위원회 운영(연 1회) 1억 5,500만원, 정책건의 보고 및 분과위원회 운영(분기별 1회) 3억 3,600만원, 정책포럼(7회) 1,800만원, 자문건의 기반시설사업이 2,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578
① 운영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44
- 운영위원회 개최 (11백만원×4회)		44
② 상임위원회 운영 * 연 1회		155
- 상임위원회 개최 (94백만원×1회)		94
-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식 (61백만원×1회)		61
③ 정책건의 보고 및 분과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336
- 분과위원회 운영 및 건의보고서 작성 (76.3 만원×4회)		305
- 정책건의 분과위원회 워크숍 (3.1백만원×10회)		31
④ 정책포럼		18
- 정책포럼 (2.6백만원×7회)		18
⑤ 자문건의 기반시설사업		25
- 회의장 운영장비 개선 (25백만원×1회)		2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은 통일문제 현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 전문가 및 국내외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00만원 감액된 2억 4,2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35	253	253	242	△11	△4.3
· 평화통일 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89	90	90	93	3	3.3
· 평화통일문제 여론조사	105	116	116	105	△11	△9.5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41	47	47	44	△3	△6.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연 4회) 9,300만원, 통일문제 여론조사(정기 4회, 수시 1회) 1억 500만원,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연 2회) 4,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평화통일 여론수렴·분석 】		242
①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연 4회		93
-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23.3백만원×4회)		93
② 통일문제 여론조사 * 연 5회(정기 4회, 수시 1회)		105
- 통일문제 여론조사 (21백만원×5회)		105
③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연 2회		44
-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44(22백만원×2회)		4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는 법정회의인 국내 및 해외 출범회의 또는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28억 6,900만원 대비 28.9%인 8억 2,800만원이 감소한 20억 4,1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1,996	2,869	2,869	2,041	△828	△28.9
·국내 출범(지역)회의	1,136	428	428	1,188	760	177.6
·해외 출범(지역)회의	860	2,441	2,441	853	△1,588	△65.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임기(2년)에 따라 격년제로 회의 방식을 변경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국내 각 지역회의별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해외 자문위원은 국내로 초청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2025년에는 국내 출범회의의 경우 제22기 자문회의 출범회의가 전체회의로 열리고, 해외 출범회의의 경우 각 해외 협의회별 현지 출범회의가 열릴 예정임.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된 2023년과 비교할 때, 2025년 예산안은 ‘국내 출범회의’ 및 ‘해외 출범회의’ 사업의 예산이 2023년 21억 4,800만원 대비 1억 700만원 감액된 20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회의방식 변화에 따른 국내·해외 출범(지역)회의 사업 예산규모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제21기 출범회의)	2024년 (제21기 지역회의)	2025년 (제22기 출범회의)
<계>	2,148	2,869	2,041
국 내	1,250 (전체회의, 해외대표 초청)	428 (17개 시·도별 회의)	1,188 (전체회의, 해외대표 초청)
해 외	898 (현지회의, 45개 협의회)	2,441 (국내 초청 회의)	853 (현지회의, 45개 협의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22기 국내 출범회의, 해외 자문위원 출석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필요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2년을 임기로 활동하며, 2025년 9월에 제22기 자문회의가 출범할 예정임.

자문회의가 출범하는 홀수년도에는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출범회의를 개최하는데, 최근 국내출범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10,5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국내 출범회의 개최 현황, 예산 및 집행액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출범회의 개최 현황 등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위원 수	예산액	
				편성	집행
제18기	'17.10.31.	강릉 아이스아레나	7,781	1,300	1,228
제19기 ¹⁾	'19. 9.30.	청와대 영빈관	425	1,300	377
제20기 ²⁾	'21.12.17.	스위스그랜드호텔(주 회의장)	12,613	1,300	856
제21기	'23.11.28.	킨텍스 제1전시장 1·2홀	10,525	1,250	1,035
제22기	미정	미정	-	1,188	-

주1)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계획한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대표 간부위 대상으로 출범식 대체 추진

주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회의장 103명 참석, 그외 온라인 참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국내 출범회의의 경우 국내 자문위원은 모두 초청 대상이지만, 해외 자문위원의 경우에는 부의장, 해외 운영위원, 협의회장, 지회장, 해외 상임위원, 간사 등 간부위원 205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제21기 해외 자문위원(136개국, 4,038명) 위촉 현황 >

(단위: 명)

해외 지역회의 (5개)	해외 지역협의회(45개)	위원 수 (4,038)	간부위원 (205)
일본	일본동부, 일본중부, 일본근기, 일본서부(4개)	443	14
중국	베이징, 광저우, 칭다오, 상하이, 선양(5개)	329	16
아시아·태평양	서남아, 동남아남부, 동남아북부, 동남아서부,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7개)	694	42
미주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샌디에고, 휴스턴, 댈러스, 애틀랜타, 마이애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덴버, 시애틀, 시카고, 토론토, 밴쿠버, 브라질, 중미·카리브, 남미서부(20개)	1,872	90
유럽·중동· 아프리카	영국, 남유럽, 북유럽, 중동부유럽, 중동, 아프리카, 모스크바, 러시아동부, 중앙아시아(9개)	700	43

지난 국내 출범회의에 참석한 해외 자문위원, 예산집행 현황 등은 다음 표 <국내 출범회의 해외위원 참석 현황 등>과 같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제22기 국내 출범회의에도 해외 자문위원을 초청하기 위한 항공료 등 국외여비(220-02) 9,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국내 출범회의 해외위원 참석 현황 등 >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일 시	해외위원 참석자 수			해외위원 초청예산		
		참석대상	참석	참석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제18기	'17.10.31.	147	116	78.9	93	69	74.2
제19기	'19. 9.30.	138	134	97.1	94	84	89.4
제20기 ^{주)}	'21.12.17.	3,860	1,940	50.3	94	9	9.6
제21기	'23.11.28.	205	114	55.6	95	61	64.2
제22기	미정	205	-	-	94	-	-

주) 제20기 출범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해외 자문위원 전원을 참석대상으로 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1년의 제20기 국내 출범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방식을 온·오프라인 병행 화상회의로 변경하고 현장 참석을 가급적 제한하여 추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해외 자문위원 초청예산이 900만원(9.6%)만 집행되었음.

2023년의 제21기 국내 출범회의는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자문위원의 위원 참석률은 55.6%, 해외위원 초청예산 집행률은 64.2%에 그치고 있음.

국내 출범회의는 자문회의 중에서 행사 규모가 가장 크고 의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등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의 일체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의라고 할 수 있음.

제21기 국내 출범회의에 출석한 해외 자문위원은 전체 자문위원 출석률(48.8%) 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 제18기 및 제19기 해외 자문위원 보다 출석률과 초청예산의 집행률이 각각 낮은 이유는 초청 대상을 여전히 해외 간부위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사무처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외 자문위원을 최대한 초청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바,

해외 간부위원의 참석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연장자 또는 참석경험이 없는 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부위원을 대신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참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라. 자문회의 구성

‘자문회의 구성’ 사업은 2025년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을 위한 것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2023년 제21기 자문회의 구성 예산 3억 4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자문회의 구성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자문회의 구성	301	-	-	304	304	순증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자문회의 구성 사업 예산(안) 비교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 총 계 >	304	-	304
[일용임금(110-04)]	48	-	49
[일반수용비(210-01)]	235	-	23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	-
[특근매식비(210-05)]	1	-	1
[임차료(210-07)]	6	-	6
[국내여비(220-01)]	1	-	1
[사업추진비(240-01)]	7	-	7
[고용부담금(320-09)]	5	-	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적정 자문위원 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및 제10조,³⁾ 같은 법 시행령 제4조⁴⁾ 등에 따라 통일정책 관련 자문 및 건의,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인사들을 2년마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2023년 2년(2023. 9. 1. ~ 2025. 8.31.)의 임기로 구성된 제21기 자문회의는 국내 17,946명, 해외 4,038명 등 21,984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이들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273개 협의회(국내 228개 시·군·구, 해외 45개 지역)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제5호의 인사를 위원으로 제청하기 위해 공모 등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규모에 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바, 자문위원 수의 하한만 명시되어 있을 뿐 그 상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1981년 자문위원 출범 당시 8,919명이었던 자문위원 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제23기 자문위원은 21,984명에 이르게 되었음.

< 역대 자문위원 현황 >

(단위: 명)

구 분	임 기	계	국내		재외동포대표
			지역대표	직능대표	
제21기	2023.9.1. ~ 2025.8.31.	21,984	3,288	14,658	4,038
제20기	2021.9.1. ~ 2023.8.31.	20,000	2,944	13,156	3,900
제19기	2019.9.1. ~ 2021.8.31.	19,000	3,118	12,282	3,600
⋮					
제14기	2009.7.1. ~ 2011.6.30.	17,800	3,317	11,839	2,644
제13기	2007.7.1. ~ 2009.6.30.	16,791	3,445	11,369	1,977
제12기	2005.7.1. ~ 2007.6.30.	17,193	3,974	11,588	1,631
제11기	2003.7.1. ~ 2005.6.30.	14,940	4,121	8,522	2,297
⋮					
제8기(2차)	1998.7.1. ~ 1999.6.30.	13,340	4,117	7,012	2,211
제8기(1차)	1997.7.1. ~ 1998.6.30.	13,305	5,325	6,059	1,921
⋮					
제5기	1991.6.29. ~ 1993.6.30.	10,918	5,170	4,756	992
제4기 ^{주)}	1987.6.1. ~ 1991.6.28.	10,593	4,846	4,763	984
제3기	1985.6.1. ~ 1987.5.31.	10,634	4,991	4,673	970
제2기	1983.6.1. ~ 1985.5.31.	10,074	5,106	4,129	839
제1기	1981.6.5. ~ 1983.5.31.	8,919	5,214	3,320	385

주) 제4기의 임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법률 제4000호, 1988. 2. 17.) 부칙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인 인사가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문위원 수의 증가는, 통일여론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 등을 통한
건의 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92조⁵⁾에 규정된 자문회의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자문(諮問: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
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
휘하기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⁶⁾

2023년 제21기 출범회의의 위원 참석률을 보면, 국내·해외 모두 2021년
의 제20기 출범회의에 비해 참석률이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출범
회의 참석률 48.8%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한 정족
수⁷⁾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었음.

< 국내·해외 출범회의 참석률 현황 >

(단위: 명, %)

구 분		제18기 (2017)	제19기 (2019)	제20기 (2021)	제21기 (2023)
출범회의 참석률	국내	7,781/16,174 (48.1)	미 개최	12,613/19,718 (64.0)	10,525/21,567 (48.8)
	해외	2,473/3,630 (68.1)	2,491/3,551 (70.1)	2,622/3,900 (67.2)	2,523/4,038 (62.5)

주: 제19기 국내 출범회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되지 못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5) 「대한민국 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수행한 외부 연구용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변화와 발전방안, 2018.)에서도 ‘대통령 자문기
구로서 규모는 방대하나,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른 기관과의 차별화가 모호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자문회의 조직·구성을 평가하고 있음.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코로나19 이후에 출범회의 개최방식을 대면·집합회의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21기 출범회의는 정족수 미달의 출범회의 개최를 위해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민주평통 사무처는 법률에서의 7천 명 하한 규정은 국력 신장, 인구 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게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자문위원의 수가 기수별로 상이하게 구성되는 등 그 구체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사무처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의 통일여론 수렴 등 참여형 회의체로서의 기능과 동시에, 통일 분야에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에 의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정 자문위원 규모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자문위원의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한 균형있는 자문위원 위촉 필요

「민주평통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추천권자가 자문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⁸⁾

현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에 대한 뒷받침 외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북·통일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민주평통 본연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바, 자문위원 구성 시 지역 및 직능의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지역별 균형의 관점에서 제21기 국내 자문위원(17,946명)의 지역별 인원 및 전기(제20기) 대비 증감인원은 다음과 같음.

< 제21기 국내 자문위원의 광역지자체별 인원 수 >

(단위: 명, %)

구 분	제21기(A)	제20기(B)	증감인원 (A-B)	증감율
	('23.9.1.-'25.8.31.)	('21.9.1.-'23.8.31.)		
서울	3,617	2,955	662	22.4
부산	919	858	61	7.1
대구	822	556	266	47.8
인천	653	630	23	3.7
광주	533	510	23	4.5
대전	382	392	-10	-2.5
울산	460	394	66	16.8
세종	136	105	31	29.5
경기	2,701	2,533	168	6.6
강원	847	824	23	2.8

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생략)

② 사무처장이 위원의 위촉을 제청하거나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여성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 청년(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인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성별, 세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9. 7. 30.>

③ (생략)

구 분	제21기(A)	제20기(B)	증감인원 (A-B)	증감율
	('23.9.1.-'25.8.31.)	('21.9.1.-'23.8.31.)		
충 북	637	621	16	2.6
충 남	901	834	67	8.0
전 북	946	899	47	5.2
전 남	1,209	1,136	73	6.4
경 북	1,299	1,172	127	10.8
경 남	1,287	1,186	101	8.5
제 주	275	226	49	21.7
이북 5도	322	269	53	19.7
합계	17,946	16,100	1,846	11.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 표에서 제20기 대비 제21기 국내 자문위원의 지역별 증감을 보면, 전체 증가율은 평균 11.5%이지만 대구의 경우 제20기 556명에서 제21기 822명으로 266명(47.8%)이 증가한 반면, 대전의 경우 제20기 392명에서 제21기 382명으로 10명(2.5%)이 감소하였음.

국내 자문위원의 지역별 위촉 위원 수와 그 비율(A)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서 해당 지역의 거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B)에 비례하여 위원을 위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남.

즉, 이북5도를 제외한 지역별 자문위원 위촉 비율을 보면, 서울의 경우 비교적 주민등록인구 수에 비례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의 경우 자문위원(2,701명, 15.9%)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26.5%에 비해 현저히 낮아 지역 대표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21기 국내 자문위원의 지역별 비율 >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5도
A	3617	919	822	653	533	382	460	136	2701	847	637	901	946	1,209	1,209	1,287	275	322
	18.0	5.3	3.6	3.6	3.3	2.3	2.4	0.6	15.9	5.1	3.9	5.1	5.4	7.3	7.4	7.4	1.5	1.9
B	18.3	6.4	4.6	5.8	2.8	2.8	2.1	0.8	26.5	3.0	3.1	4.1	3.4	3.5	5.0	6.3	1.3	-

주: B는 총인구 대비 해당지역 인구비율(2023년 9월 현재, 주민등록인구현황(외국인 제외), 행정안전부)

또한, 제21기 자문위원 중 국내 직능대표 14,658명은 다음 표와 같이 10개 직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1기 국내 직능별 자문위원 현황 >

(단위: 명)

경제과학	산업통상	건설교통	문화체육	정치행정	교육	외교안보	농림수산	보건복지	환경노동
1,351	825	1,672	3,076	1,519	1,390	958	1,039	2,190	638

주: 지역대표(지방의원) 제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21기 국내 직능별 자문위원 구성 비율 >

(단위: 명, %)

경제과학	산업통상	건설교통	문화체육	정치행정	교육	외교안보	농림수산	보건복지	환경노동	계
1,351	825	1,672	3,076	1,519	1,390	958	1,039	2,190	638	14,658
9.2	5.6	11.4	21.0	10.4	9.5	6.5	7.1	14.9	4.4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능별 자문위원의 수와 그 비율을 보면, 정치행정 1,519명(10.4%), 교육 1,390명(9.5%), 경제과학 1,351명(9.2%) 등으로 비교적 적절한 수의 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화체육은 3,076명(21.0%)으로 가장 높고, 보건복지 2,190명(14.9%), 건설교통 1,672명(11.4%)의 순서이고, 환경노동 638명(4.4%), 산업통상 825명(5.6%), 외교안보 958명(6.5%)으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제22기 자문위원 구성 시, 면밀한 사전 계획으로 자문위원 위촉 시에 지역 및 직능의 대표성을 고려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봄.

□ 사무처장의 자문위원 제청 기능을 통한 균형있는 자문위원 위촉 필요

2023년 3월 민주평통 사무처가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목표 및 자문위원 위촉계획(안)”에 따르면, 자문위원의 규모는 제20기 위원 수 2만 명 규모를 유지하되 필요시 10% 이내가 감한다고 되어 있으며,

자문위원 추천기관별 배정(안)은 다음과 같았음.

< 제21기 자문위원 추천기관별 배정(안) >

(단위 : 명)

구분	추천기관	배정(안)	배정기준
합 계		20,000	
지역대표	지방의회의원	3,500	▶ 의원 정수: 3,865명(20기 동의율: 93%) - 광역 872명, 기초 2,988명, 교육 5명
직능대표	소 계	12,500	
	지방자치단체장	3,500	▶ 광역(17) : 15~50명(인구비례) ▶ 기초(226) : 11~22명(인구비례)
	정당대표	300	▶ 선관위 등록 정당(47개)대표 추천 - 1명씩 균등 배정 + 의석수에 따라 차등 배정
	국회의원	1,360	▶ 지 역 구 : 선거인수 기준 4~5명 배정 ▶ 비례대표 : 3명씩 균등 배정
	주무관청의 장	400	▶ 중앙부처의 장 추천
	이북5도지사	300	▶ 이북5도위원회 추천
	청년참여공모	1,000	▶ 청년층(만45세 이하) 대상 공모
	사무처장 제청	5,640	▶ 자유민주 신진인사, 국민운동단체 등 : 2,000명 ▶ 청년, 최소 정원, 탈북민 등 : 2,000명 ▶ 활동우수자 등 : 1,640명
재외동포대표	소 계	4,000	
	공관장	3,200	▶ 관할 공관장(184개) 추천
	사무처장 제청	800	▶ 자유민주 신진인사, 차세대 등 : 500명 ▶ 활동우수자 등 : 300명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19기~제21기 추천권자별 자문위원 수 현황 >

(단위: 명)

구 분	추천권자	제19기	제20기	제21기	
				배정(안)	구성
합 계		19,000	20,000	20,000	21,984
지역대표	사무처장 (지방의회 의원)	3,118 (16.4%)	2,944 (14.7%)	3,500	3,288 (15.0%)
직능대표	소 계	12,282 (64.6%)	13,156 (65.8%)	12,500	14,658 (66.7%)
	지방자치단체장	3,336 (17.6%)	3,421 (17.1%)	3,500	3,366 (15.3%)
	정당대표	267 (1.4%)	263 (1.3%)	300	261 (1.2%)
	국회의원	1,242 (6.5%)	1,274 (6.4%)	1,360	1,281 (5.8%)
	주무관청의 장	355 (1.9%)	326 (1.6%)	400	308 (1.4%)
	이북5도지사가 추천한 인사	293 (1.5%)	268 (1.4%)	300	322 (1.5%)
	국민참여공모 (청년참여공모)	1,600 (8.4%)	2,000 (10.0%)	1,000	1,000 (4.5%)
	사무처장 제청	5,189 (27.3%)	5,604 (28.0%)	5,640	8,120 (36.9%)
재외동포 대표	소 계	3,600 (19.0%)	3,900 (19.5%)	4,000	4,038 (18.4%)
	관할 공관장	2,866 (15.1%)	2,897 (14.5%)	3,200	3,181 (14.5%)
	재외동포 참여공모	300 (1.6%)	290 (1.4%)	-	-
	사무처장 제청	434 (2.3%)	713 (3.6%)	800	857 (3.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19기, 제20기 및 제21기의 자문위원 구성을 위한 사무처장 제청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위 표 <제19기~제21기 추천권자별 자문위원 수 현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지역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은 의원 당사자가 지역의회에 전념하고자 자문위원을 겸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직능대표와 재외동포대표에서 사무처장 제청 비율이 각각 36.9%와 3.9%로 전체 자문위원의 40.8%를 제청하고 있는 바, 자문위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민주당 평통 사무처장이 제청 권한을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행사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있음.

따라서 자문회의법 개정을 통한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더라도, 사무처장의 자문위원 제청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정 인원 수준을 재설정함으로써 자문위원 수의 지나친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

마. 자문위원 일반지원

‘자문위원 일반지원’은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지원, 통일 유관기관·단체 대상 통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자문위원 일반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자문위원 일반지원	186	157	157	157	-	-

주요 편성내역은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지원비 4,000만원, 통일활동 지원 여비 2,000만원, 통일활동 사업추진 간담비 및 통일정책 건의 및 의견수렴 간담비 7,300만원 등임.

(단위: 백만원)

【 자문위원 일반지원 】		157
지역회의·협의회 지원 업무보조 일용인력 임금		5
국내외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지원비		40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발송료 1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물품 등 발송료 3		4
통일활동 지원 여비		20
통일활동 사업추진 간담비, 통일정책 건의 및 의견수렴 간담비		73
통일·대북정책 여론 수렴 활동경비		14
일용인력 사회보험료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바. 간부위원 활동지원

‘간부위원 활동지원’은 연중 경상적 업무 소요가 있는 법정위원회 및 지역 조직의 주요 간부위원⁹⁾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간부위원 활동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 A
		본예산(A)	추경			
간부위원 활동지원	237	250	250	25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지급대상은 수석부의장 1명, 운영위원회 간사 1명, 상임위원회 간사 2명, 지역 부의장 24명 등 총 48명이며,

월평균 지급단가는 수석부의장 600만원, 운영위원회 간사 150만원, 상임위원회 간사 130만원 등으로 간부위원별로 다음 표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9) 간부자문위원 선정 및 위촉 절차

- 간부위원 인선은 리더십, 활동역량과 의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식견(전문성), 대외 관계 협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장(대통령)이 임명

< 간부위원 활동지원 예산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월 지급액	정원	총액	월 지급액	정원	총액
수석부의장	600만원	1명	72	600만원	1명	72
운영위원회 간사	150만원	1명	18	150만원	1명	18
상임위원회 간사	130만원	2명	31	130만원	2명	31
지역 부의장	30만원	24명	87	30만원	24명	87
분과위원장	20만원	10명	24	20만원	10명	24
분과위원회 간사	15만원	10명	18	15만원	10명	18
합 계		48명	250		48명	2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비 예산과목 일치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사무처는 같은 법 제13조¹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¹¹⁾에 근거하여 간부 자문위원 48명에게 활동경비를 지급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수석부의장(1명)¹²⁾, 상임위원회 간사(2명), 운영위원회 간사(1명)의 활동경비는 직책수행경비(250-02)로, 지역 부의장(24명), 분과위원장(10명), 분과위원회 간사(10명)의 활동경비는 기타보전금(310-04)으로 편성되는 등 직책수행경비와 기타보전금 비목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음.

< 2024년도 간부 자문위원 활동지원예산 집행현황 >

(단위: 만원)

구 분	인원	총액	지급기준	비고(비목)
수석부의장	1명	7,200	600×1인×12개월	직책수행경비(250-02)
운영위원회 간사	1명	1,800	150×1인×12개월	"
상임위원회 간사	2명	3,120	130×2인×12개월	"
지역 부의장	24명	8,640	30×24인×12개월	기타보전금(310-04)
분과위원장	9명	2,160	20×9인×12개월	"
분과위원회 간사	9명	1,620	15×9인×12개월	"
계	48명	24,540		

주: 상임위원회에 10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제21기 자문회의의 분과위원회 수는 9개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10)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수당과 여비 등) ① (생략)

② 부의장, 상임위원회의 간사,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간사, 운영위원회의 간사, 지역회의의 지회장, 협의회의 회장·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드는 활동 경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2) 2018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석부의장과 사무처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2019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로 조정됨.

직책수행경비(250-02)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고, 기타보전금(340-04)은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¹³⁾

< 직책수행경비와 기타보전금 비교 >

구분	직무수행경비(250목)	보전금(310목)
적용대상	직책수행경비(250-02) <u>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u>	기타보전금(310-04)¹⁴⁾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6. <u>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u>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자문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

직제(職制)란 일반적으로 직무와 직위에 대한 제도를 의미하는 바, 자문

1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45, p. 251.

1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391.

위원이 직제에 의한 공적인 직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무보수 명예직의 민간인’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석부의장 이하 모든 자문위원의 활동 경비를 기타보전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임.

반면, 현재 기타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부의장, 분과위원장, 분과위원회 간사의 경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직위를 부여 받은 것으로 본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도 수석부의장 등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직책수행경비로 편성해야 일관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될 것임. 아울러 지역회의 지회장, 지역협의회의 회장 및 지회장에게도 직무와 관련한 활동 경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사. 직능별 정책회의

‘직능별 정책회의’는 직능별 자문위원의 통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직능별 정책회의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직능별 정책회의	184	182	182	182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직능별 정책회의 6회를 개최(1박 2일 기준)하기 위하여 숙박비, 식비, 직원 여비 등 9,700만원, 자료 인쇄비, 강연 등 사례비, 회의용품 구입비 등 5,800만원, 각종 임차료 2,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직능별 정책회의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직능별 정책회의 】		182
자료 인쇄비, 강연 등 사례비, 회의용품 등 (9.6백만원×6회)		58
차량, 노트북, 회의실 및 부대시설 등 임차료 (4.1백만원×6회)		25
숙박비, 식비, 직원 여비 등 (16.1백만원×6회)		97
역할자 간담 1.4(0.25백만원×6회)		2
기획·평가회의 0.6(0.3백만원×2회)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3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중 국내
직능대표는 14,658명이며, 이들은 다음 표와 같은 10개 직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21기 국내 직능별 자문위원 현황 >

(단위: 명)

경제 과학	산업 통상	건설 교통	문화 체육	정치 행정	교육	외교 안보	농림 수산	보건 복지	환경 노동
1,351	825	1,672	3,076	1,519	1,390	958	1,039	2,190	638

주: 지역대표(지방의원) 제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능별 정책회의는 직능별 의제에 관하여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분임토
의 및 종합토론 등을 거쳐 정책건의 및 지역실천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
하고 있음.

< 직능별 정책회의 프로그램(예시) >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일차>			
개 회	14:00~14:10(10)	○ 개회식	
	14:10~15:00(50)	○ 전문가 주제강연	
회 의	15:00~18:20(200)	○ 분임토의(정책건의 및 지역 실천방안) 및 종합토론	전문가, 자문위원
<2일차>			
회 의	09:00~09:50(50)	○ 통일 현안문제 및 전문지식 특강	
	11:10~11:30(20)	○ 종합정리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아. 지역운영위원회

‘지역운영위원회’는 국내·해외 지역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지역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지역운영위원회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지역운영위원회	294	300	300	30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5년 지역운영위원회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지역운영위원회】		300
①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125
- 배너, 현수막, 자료 인쇄비 등 26 (360,000원X18개소X4회) - 회의용품 및 음료비 8 (100,000원X18개소X4회) - 회의 참석수당 48 (50,000원X300명*80%X4회)		82
여비 (19,500원X300명X80%X4회)		19
식비 (25,000원X300명X80%X4회)		24
②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175
- 배너, 현수막, 자료 인쇄비 등 11 (1,100,000원X5개소X2회) - 회의용품 및 음료비 1 (120,000원X5개소X2회) - 참석수당 8 (50,000원X100명X80%X2회)		20
회의장 임차료 (1,000,000원X5개소X1회)		10
- 해외 지역운영위원회 여비 137 - 자문위원 숙박비 35백만원(\$200*100명*68%*2회) - 자문위원 교통비 71백만원(\$400*100명*68%*2회) - 출장직원여비 : 31백만원		137
식비 (\$25X100명X60%X2식x2회)		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은 변화관리 워크숍,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의 행정 효율성 및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6	37	37	37	-	-
- 변화관리 워크숍	30	32	32	32	-	-
- 제안제도 운영	1	1	1	1	-	-
- 성과관리제도 운영	5	4	4	4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변화관리 워크숍 3,200만원, 제안제도 운영 100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 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37
① 변화관리 워크숍		32
자료 인쇄비, 음료 및 용품 구입비, 강사료 등		7
버스, 회의실 및 부대시설 임차료		8
워크숍 일반용역비		6
숙박비		5
워크숍 참석자 식비 등		6
② 제안제도 운영		1
제안 우수자 포상금		1
③ 성과관리제도 운영		4
자문위원 설문조사, 전문가 사례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인쇄비		3
전문가 및 직원 간담비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3.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사업 추진’은 국내외 자문위원, 지역회의·협의회 등 자문회의 구성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인 2,300만원 감액된 4억 5,1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정보화사업 추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정보화사업 추진	421	474	474	451	△23	△4.9
-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198	217	217	190	△27	△12.4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97	230	230	234	4	1.7
- 행정업무용 PC 보안기능 강화	13	13	13	13	-	-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13	14	14	14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무처 각종 행정업무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상용SW 등의 전반적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4백만원 증액편성되었고, ‘자문회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2,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4. 자문위원 역량강화

‘자문위원 역량강화’는 자문위원의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책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25억 8,900만원 대비 8.9%인 2억 3,000만원이 감액된 23억 5,9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자문위원 역량강화	2,816	2,589	2,589	2,359	△230	△8.9%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928	655	655	591	△64	△9.8%
-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777	727	727	659	△68	△9.4%
- 유공자문위원 포상	104	99	99	99	-	-
-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790	692	692	649	△43	△6.2%
- 평화통일자료 지원	217	416	416	361	△56	△13.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이 여성과 해외 부분에서 6,4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이 온라인 지식서비스와 연수 규모조정으로 6,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기관지 제작’ 사업이 기관지 발간 용역사업 조정 등으로 4,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평화통일자료지원’ 사업이 영상자료 제작 횟수 조정 등으로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가.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은 청년 자문위원과 여성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6억 5,500만원 대비 9.8%인 6,400만원이 감액된 5억 9,100만원임.

< 2025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928	655	655	591	△64	△9.8
·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414	180	180	180	-	-
·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192	180	180	146	△34	△18.9
·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322	295	295	265	△30	△10.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5년도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		591
① [국내] 청년위원 역량지원		180
· 청년운영위원회 (6.1백만원×2회)		12
· 국내 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 (45백만원×1회)		45
· 청년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24백만원×5개 권역)		120
· 직원 여비		3
② [국내] 여성위원 역량지원		146
· 여성운영위원회 (6.1백만원×2회)		12
· 국내 여성분과위원장 워크숍 (45백만원×1회)		45
· 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17.2백만원×5개 권역)		86
· 직원 여비		3
③ 해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265
·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132.5백만원×2회)		26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제20기 및 제21기 여성·청년위원 현황 >

(단위: 명)

기 수	제20기	제21기	증감
여 성	6,929	6,414	△515
청 년	5,164	4,952	△212
전체위원	20,000	21,984	1,98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는 민주평통 해외 지역조직이 디브레인시스템을 통한 회계 처리가 불가하여 사무처의 관리감독 하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음.

사무처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과 협의한 결과, 국내사업과 달리 해외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지역조직의 인적·물적 토대를 먼저 마련한 후에 직접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하였다는 설명임.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은 각각 운영위원회, 분과위원장 워크숍, 역량강화 기획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세부 분류>

구 분	청년·여성 운영위원회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워크숍	청년·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추진주체	사무처	사무처	청년운영위원회/ 지역회의 청년위원회
수행방식 ^{주)}	직접집행	직접집행	직접집행
사업목적	청년·여성위원 통일활동 계획 수립·조정	청년·여성위원 활동방향 공유 및 교류·협업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통일에너지 확산 및 결집	청년·여성의 특성을 발휘하고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사업 개발·추진
사업대상	청년·여성 운영위원 (위원장, 간사, 국내·해외 지역운영위원장 등)	청년·여성 운영위원, 지역협의회 청년·여성 분과위원장 등	청년위원, 지역 청년층 등
사업내용	△ 청년·여성위원 기획사업 계획(안) 논의 및 결과 보고 △ 시·도별 청년·여성 통일활동사업 계획(안) 논의 및 조정 △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안건	△ 기초강연·특별강연, △ 주제 토의 및 발표, △ 정보 교환 및 교류 프로그램 등	지역별 청년 통일의지 결집 및 체험 프로그램, 학술회의, 캠페인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주: '2022년 기획재정부 보조금연장평가' 결과, 사무처의 국내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은 2024년부터 사업추진 방식을 직접 집행사업으로 개편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청년위원 역량지원 관련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청년 운영위원회	-	-	-	11	5	45	12
청년 분과위원장 워크숍	48	33	69	49	3	6	48
청년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72	283	393	120	200	167	120
지역별 통일활동 사업	186	83	45	-	-	-	-
총 계	306	399	130	180	208	116	18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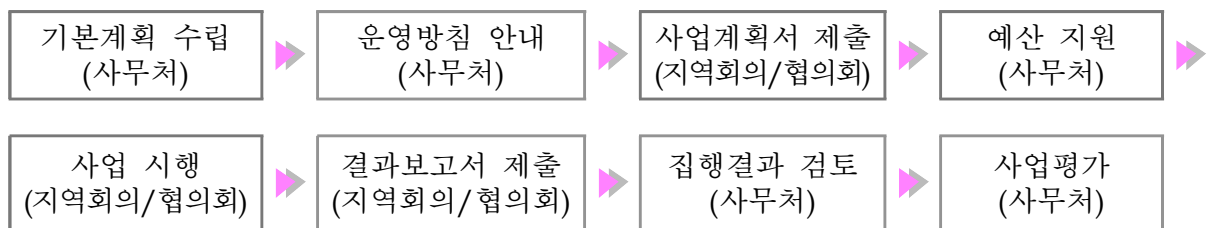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안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액
여성 운영위원회	-	-	-	11	5	45	12
여성 분과위원장 워크숍	48	44	92	49	54	110	48
여성위원 역량강화 기획사업	72	35	48	120	40	33	86
지역별 통일활동 사업	186	134	72	-	-	-	-
총 계	306	213	67	180	99	55	14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각 사업의 집행현황을 보면, 청년위원 역량지원 관련 사업들은 2023년에 평균 130%, 2024년 9월 현재 116%로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위원 역량지원 관련 사업들은 2023년에 67%, 2024년 9월 현재 55%로서 다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집행절차 >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집행절차를 보면, 공통적으로 사무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에 운영방침을 안내하면, 각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에서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사무처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되므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영역별 집행액을 예상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제21기 여성·청년위원 현황 >

(단위: 명, %)

	청년위원	여성위원	전체위원수
위원 수(비율)	4,952(22.5)	6,414(29.2)	21,98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전 사업들의 집행 실적을 고려한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사무처는 여성위원 수가 청년위원 수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는 간부 자문위원과 지역별로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사업과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일콘텐츠 및 연수자료집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7억 2,700만원 대비 9.4%인 6,800만원이 감액된 6억 5,9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777	727	727	659	△68	△9.4
·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82	141	141	111	△30	△21.3
· 간부위원 역량지원	142	144	144	145	1	0.7
· 국내 자문위원 연수	384	372	372	333	△39	△10.5
· 연수자료집 제작	69	70	70	70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감액 사유는 사업 구조조정으로 ‘국내 자문위원 연수’ 사업이 규모를 축소하여 2024년 3억 7,200만원 대비 3,900만원 감액된 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사업은 제작 편수를 줄여 3,000만원 감액된 1억 1,1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지역 통일준비 역량강화】		659
①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연 11회		111
· 온라인 지식서비스 제작		106
· 기획·평가 간담 등		5
② 간부자문위원 역량지원 *연 2회		145
· 국내 부의장·협의회장 및 지역회의·협의회 간사 워크숍 (72백만원×2회)		144
· 직원 여비 (100천원×6명×2회)		1
③ 국내 자문위원 연수 *연 18회		333
· 권역별 자문위원 연수 용역 (17.5백만원×18회)		315
· 기술평가회의 및 평가회의 및 조달수수료		5
· 직원 여비 (150천원×4명×18회)		11
· 기획·평가회의 간담비 (30천원×10명×8회)		2
④ 연수 자료집 제작		70
· 집필 사례비 및 기획회의 (11.5백만원×2회)		22
· 연수 자료집 발간 (6,000원×8,000부)		4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유공자문위원 포상

‘유공자문위원 포상’은 통일정책건의 및 지역 통일 활동에 기여가 큰 자문위원(개인)과 지역협의회(단체)를 포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9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유공자문위원 포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유공자문위원 포상	104	99	99	99	-	-
· 공적심사	6	8	8	8	-	-
· 국민훈장 수여	19	34	34	34	-	-
· 의장표창 수여	79	57	57	57	-	-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공적 심사자료 인쇄비, 행사용품 및 음료비, 안내물 제작비 등 5,800만원, 수여식 다과비 및 간담비 800만원, 포상금 3,000만원 등임.

< 2025년도 유공자문위원 포상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유공자문위원 포상 】		99
· 공적 심사자료 인쇄비, 행사용품 및 음료비, 안내물 제작비, 지급품 제작비, 사례비, 영상중계비, 사진인화비		58
· 행사장 및 화물차 임차료		3
· 수여식 다과비 및 간담비		8
· 포상금		3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기관지 제작

‘기관지 제작’은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 통일기반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조직과 자문위원의 우수활동사례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6억 9,200만원 대비 6.2%인 4,300만원이 감액된 6억 4,9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기관지 제작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민주평통 기관지 제작	790	692	692	649	△43	△6.2
· 기관지 발간	542	436	436	392	△44	△10.1
·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215	220	220	220	-	-
· 공무원 인건비	33	36	36	37	1	2.8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감액 내역은 ‘기관지 발간’ 사업조정에 따른 4,400만원 감액임.

< 2025년도 기관지 제작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기관지 제작 】		649
① 기관지 발간 * 6회		392
발송작업비, 기획·편집위원 및 평가회의 사례비, 조달수수료 등		35
기관지 우편발송비		138
기관지 발간 용역비		212
평화통일활동 취재		3
기획편집, 제작 및 평가 간담		4
② 블로그 제작 및 SNS 운영		220
블로그 기획·편집위원 등 사례비, 편집회의 음료 구입비, 조달수수료 등		14
블로그 제작, 모바일 뉴스레터 용역비		202
평화통일활동 취재		2
블로그 운영 간담비		2
③ 공무원 인건비		37
영상 기획·편집 및 SNS 운영 지원 인력		31
맞춤형 복지비		0.5
고용부담금		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마. 평화통일자료 지원

‘평화통일자료 지원’은 대북·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13.4%인 5,600만원이 감액된 3억 6,1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평화통일자료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B-A)/A
평화통일자료 지원	217	416	416	361	△56	△13.4
· 영상자료 제작	68	245	245	214	△31	△12.7
·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38	15	15	26	10	65.3
· 공무원 인건비	70	72	72	75	3	3.7
·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41	83	83	46	△37	△44.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인쇄비 및 발송경비 등으로 1,000만원 증액(인쇄비 반영), ‘영상자료 제작’ 사업이 횟수 감소(30회 → 25회)로 3,100만원 감액,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는 3,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평화통일자료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평화통일자료 지원 】		361
① 영상자료 제작		214
패널·기획팀 사례비, 촬영 소모품 구입비		28
영상 촬영 및 편집비		181
업무협의 간담비		1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입비		4
② 기타 평화통일자료 지원		26
인쇄비, 해외 발송경비		23
국내 발송경비		2
업무협의 간담비		1
③ 공무원 인건비		75
온라인 활동 보조, 사진 등 촬영·편집		62
맞춤형 복지비		1
고용부담금		12
④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46
홈페이지 다국어 번역서비스 용역비		4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5. 지역협의회 운영

‘지역협의회 운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 및 해외 조직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직원 실무능력 제고 등 지역통일활동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122억 6,500만원 대비 7.9%인 9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2억 3,900만원임.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실장 처우 개선을 위해 ‘협의회 인건비’ 예산이 5억 6,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협의회 운영비’ 예산은 해외 부분에서 4억 800만원 증액되었음.

<2025년도 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지역협의회 운영	12,272	12,265	12,265	13,239	974	7.9
- 협의회 인건비	8,917	9,220	9,220	9,786	566	6.1
- 협의회 운영비	3,293	2,967	2,967	3,375	408	13.8
- 협의회 직무교육	62	78	78	78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가. 협의회 인건비

‘협의회 인건비’는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250명)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92억 2,000만원 대비 6.1%인 5억 6,600만원이 증액된 97억 8,6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협의회 인건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협의회 인건비	8,917	9,220	9,220	9,786	566	6.1
· 공무원 근로자	8,882	9,160	9,160	9,725	565	6.2
· 출산휴가 대체 근로자	9	49	49	50	1	0.2
· 장애인 고용부담금	26	11	11	11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증액 사유는 공무원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급여단가와 초과근무수당 상향임.

< 2025년도 협의회 인건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협의회 인건비 】		9,786
▪ 공무원 근로자		9,725
· 급여 (2,072,000원×12월×250명)		6,216
· 명절휴가비 (2,072,000원×50%×2회×250명)		518
· 초과근무수당 (10,030원×1.5×15시간×12월×250명)		677
· 연차휴가근로수당 (80,240원×10일×250명)		201
· 정액급식비 (140,000원×12월×250명)		420
· 맞춤형 복지비 (500,000원×250명)		125
· 퇴직금 (8,031,625,000원×1/12)		669
· 사회보험료 (8,031,625,000원×11.22%)		901
· 단수조정		△2

▪ 출산휴가 대체근로자	50
· 급여 (2,095,740원×2월×10명)	42
· 퇴직금 (41,915,000원×1/12)	3
· 사회보험료 (41,915,000원×11.22%)	5
▪ 고용 부담금	11
· 기본 부담금 (1,060,000원×2명×5월)	1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운영비’는 국내·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33억 7,500만원으로서 2024년도 29억 6,700만원에 비해 13.8%인 4억 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증액사유는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지원 상향임.

< 2025년도 협의회 운영비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협의회 운영비	3,293	2,967	2,967	3,375	408	13.8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858	1,672	1,672	1,672	-	-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435	1,295	1,295	1,703	408	31.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5년도 협의회 운영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협의회 운영비 】		3,375
▪ 국내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672
국내 지역회의 (0.9백만원×18개소×12월)		194
국내 지역협의회 (0.54백만원×228개소×12월)		1,478
▪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비		1,703
해외 송금 수수료		4
해외 지역회의 (4.16백만원×5개소×12월)		250
해외 지역협의회 (2.68백만원×45개소×12월)		1,44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국내 운영비 산출 근거 >

(단위: 천원)

구 분	공공요금및제세	사무실유지비	화주운영보장비	행사개최 보조경비	계
지역회의	150	300	200	250	900
협의회	100	200	120	120	54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해외 운영비 산출 근거 >

(단위: 천원)

구 분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계
지역회의	720	960	2,480	4,160
협의회	480	640	1,564	2,684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처는 국내 18개 지역회의, 228개 지역협의회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으며, 해외 5개 지역회의, 45개 협의회에는 분기별로 운영비를 교부하며, 지회는 협의회에서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임차료, 인건비, 기타경비 등은 월 평균 금액 산출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해외 지역별로 물가 수준 등이 달라 지역회의 등 50곳에 송부하는 금액은 편차가 있음.

다. 협의회 직무교육

‘협의회 직무교육’은 국내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무원 직무교육을 통한 행정실무능력 및 통일활동 사업의 기획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과 동일한 7,800만원임.

< 2025년도 협의회 직무교육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협의회 직무교육	62	78	78	78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5년도 협의회 직무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협의회 직무교육 】		78
· 교육자료 및 업무매뉴얼 인쇄비, 행사용품비, 강사료 등		24
· 차량 임차료, 회의실 및 부대시설 임차료		20
· 우수직원 시상금 등		6
· 숙박비, 식비, 직원 출장비		26
· 지역별 업무협의 및 평가 간담비		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6.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 및 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통일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56억 9,800만원 대비 8.4%인 4억 7,600만원 증액된 6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4,895	5,698	5,698	6,174	476	8.4
- 평화통일포럼	565	474	474	325	△150	△31.6
- 평화통일 시민교실	344	344	344	394	50	14.5
- 지역통일활동 지원	2,691	3,555	3,555	4,523	969	27.3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1,030	1,030	1,030	637	△393	△38.2
- 해외 통일정책	171	201	201	201	-	-
-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94	94	94	94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이 9억 6,900만원,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이 5,000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이 3억 9,300만원, ‘평화통일포럼’ 사업이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가.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포럼’은 국내 시·도별, 해외 주요 국가별로 자문위원과 여론주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 논의, 대안 모색, 여론 수렴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4억 7,500만원 대비 31.6%인 1억 5,000만원 감액된 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평화통일포럼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평화통일 포럼	585	475	475	325	△150	△31.6
· 국내 평화통일포럼	181	89	89	89	-	-
· 해외 평화통일포럼	404	386	386	236	△150	△38.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평화통일포럼’이 전년과 동일한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해외 평화통일포럼’은 국제 학술회의 개최 통폐합으로 1억 5,000만원 감액된 2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평화통일포럼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평화통일포럼 】 (국내 17회 / 해외 4회)		325
① 국내 평화통일포럼 * 17개 시·도별		89
▪ 포럼 개최 79(4.6백만원×17개 지역회의)		79
▪ 포럼 평가회의 등 10		10
② 해외 평화통일포럼		236
▪ 포럼 개최 236(78.7백만원×3회)		236
* 단가 상향 62백만원 →78.7백만원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나. 평화통일 시민교실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국내 지역협의회가 남북관계 및 대북·통일정책 이해 증진과 통일여론 수렴을 위하여 자문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3억 4,400만원 대비 14.5%인 5,000만원 증액된 3억 9,4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평화통일 시민교실	326	344	344	394	50	14.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사업은 ‘평화통일 시민교실’을 개최하고자 하는 국내 지역협의회가 주제·목적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선정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154개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2025년도 평화통일 시민교실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평화통일 시민교실 】	
▪ 평화통일 시민교실 개최 (2.5백만원×154개소)	384
▪ 기획·평가회의 등 (0.8백만원×4회)	3
▪ 직원 출장여비 (0.1백만원×1명×65회)	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다. 지역통일활동 지원

‘지역통일활동 지원’은 국내외 지역협의회 단위의 통일 특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35억 5,500만원 대비 27.3%인 9억 6,900만원 증액된 45억 2,3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지역통일활동 지원	2,656	3,555	3,555	4,523	969	27.3
· 정기회의	963	945	945	914	△31	△3.3
· 특화사업	1,693	2,610	2,610	3,609	999	38.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특화사업은 국내 특화사업인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추진을 위해 8억 4,000만원, 해외 특화사업 중 지역추진 사업이 2억 8,500만원 각각 증액된 반면,

국내 정기회의에서 영상자료 용역비 3,100만원 감액, 해외특화사업 중 글로벌 전략 특위 예산이 1억 2,500만원 감액 편성됨.

< 2025년도 지역통일활동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지역통일활동 지원 】	4,523
① 국내 정기회의(4회, 분기별)	579
▪ 논의 참고자료 작성, 종합 분석 자료집 제작 및 발송	29
▪ 국내 지역협의회별 정기회의 (597.4천원×230개소×4분기)	550
② 해외 정기회의(연 3회)	335
▪ 토론자료 번역 및 감수, 의견수렴 결과 분석 사례비	18
▪ 해외 지역협의회별 정기회의 (2.35백만원×45개소×3회)	317
③ 국내통일 특화사업	1,883
▪ 국내 특화사업 (3.35백만원×246개 지역회의·지역협의회)	825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3.41백만원×246개 지역회의·지역협의회)	840
▪ 국내 청년 특화사업 (4.95백만원×20회)	99
▪ 국내 여성 특화사업 (4.95백만원×20회)	99
▪ 국내 직원 출장여비	20
④ 해외통일 특화사업	1,726
▪ 해외 특화사업 (13백만원×95개 지역회의·지역협의회·지회)	1,232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컨퍼런스(125백만원X1회)	125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조달 수수료 등	6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용역비	305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지원 직원 여비	2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국외 여비	54
▪ 글로벌 전략 특별위원회 간담비	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추진 시 지역조직의 장점 살릴 필요

국내통일 특화사업 중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은 2024년 5월 수립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¹⁵⁾에 따른 민주평통의 세부 추진과제로서, 탈북민을 포용하고 '우리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멘토링 사업, 탈북민 지역공동체 참여 확대 사업, 탈북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사업 등의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 8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내용>

- ▷ **멘토링** 자문위원(멘토)-탈북민(멘티)간 결연 및 맞춤형 멘토링으로 탈북민을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포용, 성공정착에 도움
 - * 멘토·멘티 간담회, 멘토·멘티가 함께하는 통일현장 탐방 등 추진
- ▷ **지역공동체** 탈북민과 함께하는 지역협의회 통일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 탈북민을 포용,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안착
 - * 지역 탈북민과 함께하는 지역 음악회, 한마음 체육대회, 탈북민과 함께하는 플로깅(plogging) 지역봉사 등 추진
- ▷ **인식 개선** 탈북민은 일방적 지원대상이 아니라, 통일준비와 사회통합,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국민인식을 변화
 - * 탈북민 강사 초청 강연회, 탈북민과 함께하는 북한음식 나눔 사업 등 추진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히 멘토링 사업은 2024년의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7월말 현재 18개 지역회의에서 699쌍의 자문위원(멘토)-탈북민(멘티)가 결연하여 정착 지원 등에서 소정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됨.

15)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5.28 수립)

(개요)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법정부 차원**의 탈북민 지원 종합계획

(내용)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기본계획, **6대 분야 25개** 정책과제 도출

(민주평통 추진과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 성공 정착 추진**

< 지역회의별 멘토링 결연 현황 >

(단위: 쌍)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계
매칭	108	35	32	16	9	14	22	3	116	699쌍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북5도	
매칭	18	45	75	31	33	51	62	6	2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2024년 7월 기준)

민주평통 사무처는 2025년에 동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246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멘토링 결연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한 동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며, 멘토링 관리·모니터링(멘토→협의회→지역회의→사무처)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멘토링 외에도 탈북민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 음악회, 한마음 체육대회, 플로깅(plogging)¹⁶⁾ 지역봉사 등을 추진하고, 탈북민이 일방적인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준비,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임을 홍보하기 위한 탈북민강사 초청 강연회, 북한음식 나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임.

동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수행중인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의 ‘지역사회 정책 지원’, ‘주민통합 및 상호인식 제고’ 등 통일부 사업들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고, 행정안전부(이북5도위원회) 소관의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사업¹⁷⁾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남

16) 플로깅: 스웨덴어 ‘plocka up(플로카 업, 줍다)’과 영어 ‘jogging’이 합쳐진 말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함.

17) 행정안전부는 동 세부사업(1531-300)에 2024년 5억 1,300만원, 2025년 예산안에 6억 1,3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북이음 교육과정, 가족결연 사업,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서도 이북도민과 탈북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사무처는, 통일부 하나센터의 경우 시·도별 1-2개씩, 전국에 총 25개만 존재하지만, 민주평통은 전국 18개 시·도(이북5도 포함) 및 228개 시·군·구 지역조직(지역협의회)의 직능대표와 지역대표를 활용할 수 있고, 탈북민 자문위원도 최소 1명씩을 위촉하여 지역 탈북민에 대한 밀착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동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이북5도위원회 등과 협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주평통 지역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탈북민의 정착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라.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관, 국가관 등의 정립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10억 3,000만원 대비 38.2%인 3억 9,300만원 감액된 6억 3,7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청소년 통일공감 사업	1,029	1,030	1,030	637	△393	△38.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감액 사유는 ‘청소년 통일골든벨’ 국내 사업을 청소년 통일공감사업으로 개편한 것임.

< 2025년도 청소년 평화통일공감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청소년 통일공감 】	
■ 청소년 통일골든벨	637
-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317(15.85백만원×20개협의회×1회)	317
- 청소년 통일골든벨	
· 해외 예선대회 225(5백만원×45개소)	225
· 해외 결선대회 75(75백만원×1회)	75
· 문제 출제위원, 심사위원 사례비 등 12	12
· 문제 출제위원 업무협의 간담비 1	1
· 사업 지원 직원 여비 7	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마.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해외 통일정책강연회’는 해외 자문위원 및 재외동포에게 통일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통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2억 1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195	201	201	201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2025년도 해외 통일정책강연회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해외 통일정책 강연회 】	
① 기획 및 사전준비	25
자료 인쇄비, 물품 구입 및 현수막 등	23
기획 및 준비 협의 간담비	2
② 강연회 개최 *16회	176
실시단 여비	69
현지 개최 (6.7백만원×16회)	107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바.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는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발견·체감할 수 있는 통일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와 동일한 9,400만원으로 편성됨.

< 2025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91	94	94	94	-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동 내역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은 지난 해와 동일함.

< 2025년도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3회		94
· 시민대화 개최 (25백만원x3회)		74
· 기획회의, 활동종합 및 홍보영상 제작		8
· 직원 출장 여비		3
· 사전기획, 준비위원회, 실무회의 및 평가 간담		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7. 청사관리 운영

‘청사관리 운영’은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경비, 청소 및 조리원을 직접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3억 9,400만원 대비 3.6%인 1,400만원이 증액된 4억 800만원임.

< 2025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 청사관리 운영	375	394	394	408	14	3.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청사 관리 인력은 방호원 6명, 미화원 3명, 조리원 1명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시급 인상 에 따른 것으로 1,400만원 증액 편성됨.

< 2025년도 청사관리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

(단위: 백만원)

【 청사관리 운영 】			408
청사 방호원	미화원	조리원	
· 급여 164 (2,285,780원×12월×6명)	· 급여 74 (2,057,940원×12월×3명)	· 급여 25 (2,057,940원×12월×1명)	263
· 정액급식비 10 (140,000원×12월×6명)	· 정액급식비 5 (140,000원×12월×3명)	· 정액급식비 2 (140,000원×12월×1명)	17
· 명절휴가비 14 (2,285,780원×50%×2회×6명)	· 명절휴가비 6 (2,057,940원×50%×2회×3명)	· 명절휴가비 2 (2,057,940원×50%×2회×1명)	22
· 야간수당, 연가보상비 등 31 - 야간수당 26 - 연가보상비 5	· 연가보상비 3	· 연가보상비 1	35
· 보험료, 퇴직금 등 43	· 보험료, 퇴직금 등 17	· 보험료, 퇴직금 등 6	66
· 맞춤형 복지비 3 (500,000원×6명)	· 맞춤형 복지비 1 (500,000원×3명)	· 맞춤형 복지비 1 (500,000원×1명)	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기타 : 통일촉진기금 조항 정리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장(통일촉진기금) 제30조¹⁸⁾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률조문은 2009년 5월 이후 시행되었으나, 이 법 시행령에는 통일촉진기금과 관련된 조문이 규정된 바 없고,

개별 기금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5조¹⁹⁾에 따라 같은 법 [별표 2]에 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명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현행 [별표 2]의 “기금설치 근거법률” 68개 중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이 포함되지 않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14조²⁰⁾에 따르면, 기금의 신설을 위해서는 심사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장 통일촉진기금 <개정 2009. 5. 28.>

제30조(통일촉진기금)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0)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타당성, 적합성 등 심사를 거쳐야 함.

해당 조문은 신설 이후 한번도 시행되지 못한 사문화 조문이고, 향후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추가될 가능성도 현저히 낮으므로, 조문 정비 차원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I.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예산안 개요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관	항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9	1,026	1,017	11,300	
재산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1	1	순증	금융기관 이자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	1,000	1,000	순증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반납금 등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9	20	11	122.2	증명서 등 영사 민원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	5	5	순증	물품 매각 등 수입금

* 재외공관 세입은 외교부에서 일괄 징수 후 국고세입, 재외동포청은 국내세입만 징수 예정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900만원 대비 11,300%에 해당하는 10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 출

1) 기능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6,660	107,063	403	0.4
일반지출	106,660	107,063	403	0.4
인 건 비	12,721	10,214	△2,507	△19.7
기본경비	5,683	5,856	173	3.0
주요사업비	88,256	90,993	2,737	3.1

* '24년 예산 현액 대비 4억3백만원 증액(0.4%)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70억 6,300만원으로, 전년 세출예산액 1,066억 6,000만원 대비 4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예산안 부문별 내역

가. 세 입

(단위: 백만원)

관	항	2024 예산(A)	2025 예산안(B)	증 감 (B-A)	증감률	비고
					(%)	
11						
재산수입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1	1	순증	
12						
경상이전수입						
	59					
	기타경상이전 수입	-	1,000	1,000	순증	
1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5					
	면허료 및 수수료	9	20	11	122.2	
	69					
	잡수입	-	5	5	순증	
소관 합계		9	1,026	1,017	11,300	

나. 세 출

1) 성질별 · 사업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1. 인 건 비	12,721	10,214	△2,507	△19.7
2. 기본경비	5,683	5,856	173	3.0
3. 사 업 비	88,256	90,993	2,737	3.1
- 신규사업(1건)				
동포간담회 개최	-	1,750	1,750	순증
- 계속사업(16건)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1,502	1,114	△388	△25.8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22,194	22,652	458	2.1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310	131	△179	△57.7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23,754	27,757	4,003	16.9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728	582	△146	△20.1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549	5,896	△653	△10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610	1,340	△270	△16.8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458	2,649	191	7.8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8,892	9,969	1,077	12.1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59	1,917	△242	△11.2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11,657	6,253	△5,404	△46.4
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1,571	1,538	△33	△2.1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551	1,096	545	98.9
공보·홍보 역량강화	1,687	4,209	2,522	149.5
행정효율성 증진 및 역량강화	300	240	△60	△20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2,334	1,900	△434	△18.6

2) 프로그램 · 단위사업별 분류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106,660	107,063	403	0.4
5000 재외동포 지원	83,935	84,644	709	0.8
5031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1,502	2,864	1,362	90.7
503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46,258	50,540	4,282	9.3
503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728	582	△146	△20.1
5034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0,617	9,885	△732	△6.9
5035 (재외동포 보듬기)	8,892	9,969	1,077	12.1
5036 (편리한 동포 생활)	15,938	10,804	△5,134	△32.2
7100 재외동포 행정지원	22,725	22,419	△306	△1.3
7101 (인건비)	12,721	10,214	△2,507	△19.7
7111 (기본경비)	5,683	5,856	173	3.0
7121 (재외동포청 업무지원)	4,321	6,349	2,028	46.9

3) 국고보조금 사업

< 국고보조금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총 계	651	867	216	33.2	
민간경상보조	651	181	△470	△72.2	■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 동포 관련 단체 지원)
지자체경상보조	-	686	순증	순증	■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재외동포청 소관 세출예산안의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및 자치단체경상보조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25년도 예산안 총액은 8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는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및 국내 동포 관련 단체 지원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7,000만원(△72.2%) 감액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국내동포 관련 단체지원 예산에 포함된 한인 러시아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관련 계기성 예산(500백만원)이 2025년에는 미반영되었기 때문임.

< 민간경상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651	181	△470	△72.2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 동포 지원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100	130	30	30	■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 자녀 지원 확대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551	51	△500	△90.7	■ 계기성 사업 종료 ■ 국내 동포 관련 단체 지원

□ 지자체경상보조

지자체경상보조는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신규 내역 사업인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사업이며, 2025년도 예산안은 68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지자체경상보조 현황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전년대비(B-A)		비 고
			증감	%	
총 계	-	686	순증	순증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국내동포 관련단체 지원)	-	686	순증	순증	■ 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별 맞춤형 정착 지원

3.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특징

가. 세 입

< 2025년도 재외동포청 세입예산안 >

(단위: 백만원)

관	항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 고
합 계		9	1,026	1,017	11,300	
재 산 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	1	1	순증	금융기관 이자
경상이전수입	기타경상 이전수입	-	1,000	1,000	순증	재외동포단체 보조금 반납금 등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9	20	11	122.2	증명서 등 발급 수수료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잡수입	-	5	5	순증	물품 매각 등 수입금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0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900만원 대비 11,300%에 해당하는 10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액 사유는 동포단체 사업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반납 등 기타 경상이전 수입과 증명서 등 영사 민원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예상됨에 따른 것임.²¹⁾

21) 정부의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입예산안은 651.8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재외동포청 소관 10억 2,600만원의 비중은 0.000157%임.

* 재외동포청 총세입예산안: 10억 2,600만원
- 일반회계: 10억 2,600만원

나. 세 출

1) 예산안 총괄

< 2025년도 재외동포청 세출예산안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6,660	107,063	403	0.4
일반지출	106,660	107,063	403	0.4
인 건 비	12,721	10,214	△2,507	△19.7
기본경비	5,683	5,856	173	3.0
주요사업비	88,256	90,993	2,737	3.1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300만원 (0.4%) 증액된 1,07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²²⁾. 이는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비는 27억 3,700만원이 증액(3.1%)되었으나,²³⁾ 예산상 반영 직급 현실화, 불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가 감액(△19.7%) 편성됨에 기인하는 것임.

22) 2025년도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77.4조로, 전년대비 20.8조(3.17%) 증액되었음.

23) 정부의 총(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세출예산안은 677.4조원이 편성되어, 이 중 재외동포청 소관 1,070억원의 비중은 0.016%임

(2024년도 본예산 기준 정부 총 세출예산은 656.6조원이며, 재외동포청 1,066억원 비중은 0.016%임)

* 재외동포청 총 세출예산안 : 1,070억원

－ 일반회계 : 1,070억원

2) 재외동포청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① 동포사회의 세대 교체에 대응하기 위한 한인 정체성 함양, ②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과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거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동포들에 대한 지원 확대, ③ 동포사회와 우리나라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④ 동포사회와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재외동포청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원 증액(14.3%)하였고, 그간 지연되었던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7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외동포청 대표사업중 하나인 한글학교 역량강화 사업도 9억원 증액(5.1%)하였음.

“재외동포”의 범주를 국내 체류하는 동포로까지 확대하며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예산을 10억원 증액(순증)하고, 러시아 강제 이주, 원폭 피해, 파독 근로 등 역사적 배경을 가진 동포들과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그동안 소외된 동포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는 사업을 통해 이들이 한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예산도 11억원 증액(12.1%) 편성하였음.

아울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간 교류 협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한인비즈니스 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24년 대비 5억원 증액(29.4%)하고,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와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 회·관련 단체 등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예산도 2억원(28.6%) 증액함.

한편, 동포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의 정상·총리 외교 사업 중 동포간담회 내역사업을 이관받아 신규 세부사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포청의 기본적인 공보 기능을 강화하고 SNS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소통·홍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17→42억원)하였음.

3) 세출예산안의 구성 및 특징

가) 개 요

세출 예산안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5.1억원 감액된 102.1억, 기본경비는 3% 증액된 58.6억원, 주요사업비는 3.1% 증액된 909.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량적 편성이 어려운 인건비, 기본경비는 전체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61억원임.

나) 2025년도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내역

< 프로그램별 예산안 변동 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금액	%
소관 합계	106,660	107,063	403	0.4
재외동포 지원	83,935	84,644	709	0.8
재외동포 행정지원	22,725	22,419	△306	△1.4

2025년도 재외동포청 프로그램별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4억원(0.4%)이 증액되었음.

전년 대비 증액된 프로그램의 내역을 보면,

① ‘재외동포 지원’은 전년 대비 7억원(0.8%)이 증액되었고, ② ‘재외동포 행정지원’은 3억원(1.4%)이 감액되었음.

프로그램별로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한인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보듬기,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 협력 강화, △재외동포 대상 민원 서비스 강화 등 주요 정책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40억원, 공보·홍보 역량 강화 25.2억원,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10.8억원,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5.5억원,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4.6억원, 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1.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동포간담회 개최 17.5억원이 순증되었음.

‘재외동포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민원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조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사업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2억원이 증액, 인건비는 25억원 감액되었음.

Ⅱ. 2025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 재외동포 지원

가. 프로그램 개요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별·분야별·세대별 맞춤형 동포지원 및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증진을 통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6개의 단위사업,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 재외동포 지원 프로그램 예산안 현황 >

(단위: 백만원)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예·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5000]재외동포 지원			66,616	66,616	64,394	83,935	84,644
	[5031]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909	909	399	1,502	2,864
		[301]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909	909	399	1,502	1,114
		[302]동포간담회 개최	-	-	-	-	1,750
	[5032]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31,490	31,490	35,589	46,258	50,540
		[301]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17,798	17,798	17,268	22,194	22,652
		[302]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	-	-	310	131
		[303]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13,692	13,692	18,321	23,754	27,757
	[5033]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497	497	463	728	582
		[301]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497	497	463	728	582
	[5034]	재외동포와 모국간의 교류 협력 강화 및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13,971	13,971	9,786	10,617	9,885
		[301]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9,516	9,516	6,048	6,549	5,896
		[302]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972	1,972	1,619	1,610	1,340
		[303]재외동포·국내 중소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2,483	2,483	2,119	2,458	2,649
	[5035]	재외동포 보듬기	9,413	9,413	8,576	8,892	9,969
		[301]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9,413	9,413	8,576	8,892	9,969

프로 그램	단위 사업	세부사업	2023년 예·결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본예산	추경	결산		
	[5036]	편리한 동포 생활	10,336	10,336	9,581	15,938	10,804
		[301]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2,159	1,917
		[302]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8,364	8,364	7,638	11,657	6,253
		[303]재외동포 글로벌 서비스 강화	1,706	1,706	1,700	1,571	1,538
		[304]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266	266	243	551	1,096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11억원, 한글학교 역량강화 9억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 3억원, 사할린동포 지원 2억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 5억원,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활동 지원 2억원, 공보·홍보 역량 강화 2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10억원, 동포간담회 개최 18억원, 중단되었던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재개에 따른 72억원이 각각 순증되었음.

나.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동 사업은 재외동포정책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국민 여론, 동포사회 분위기 등을 조사·수렴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3억 8,800만원이 감액된 1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	399	1,502	1,214	1,114	△388	△25.8

□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 방식 재설계 필요

동 사업은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재외동포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홍보하고 재외동포청을 소개하는 특강을 실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의 2025년도 예산안은 강사사례비, 다과나 기념품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사업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	17	18	18	1	5.9

국내 대학 및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각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방문학교를 선정 한 후, 청에서 재외동포 관련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특강을 시행함. 교육 주제는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의 모국기여, 역사적 특수동포, 소외재외동포, 국내체류동포 등 재외동포 관련 자유 주제를 강의 주제로 하고 있음.

< 2024년도 사업 시행 내역 >

실시 연도	학교명	강연자	강의 주제
2024년 상반기	제주대학교	대학 교수	국내 체류동포를 통한 국내 다문화 사회 이해
	강원대학교	대학 교수	재외동포의 역사와 정책
	중대초등학교	민간단체 연구원	자랑스러운 재외동포의 활약상
	신부초등학교	대학 교수	고려인 동포의 역사 및 문화 이해
	경인교육대학교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 정책과 교육
	천안신부초	대학 교수	고려인 동포의 역사 및 문화 이해
	동덕여자대학교	대학 교수	이탈리아 재외동포 이주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 교수	아프리카 재외동포의 이해
	대전서일고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청의 기능과 역할
	대전유성중	동포신문 편집국장	재한중국동포의 이해
	충남신평중	대학 연구원	아카이브를 통해 살펴본 재외동포 이주사
2024년 하반기 ※5개교 추가 시행 예정	동덕여대	대학 교수	고려인 이주 역사
	고산고	대학 교수	국내 체류 동포와 다문화 사회
	온양용화고	대학 교수	고려인 이주 역사
	이순신고	대학 교수	고려인 동포의 이해

재외동포청은 청의 사업이 일반 내국민이 아닌 재외동포를 정책대상으로 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환경이 되는 국내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자 인식 틀이 형성되는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 선정된 학교만을 대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주제로 일회성,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내국민 인식 제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교육 내용과 주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디지털 교육의 실시 등을 통한 교육대상의 확대 등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위난 재외동포 긴급지원 예산의 집행 방안 마련 필요

동 사업은 해외 위난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과 주재국 정부의 지원 선행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동 포사회에 생필품이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임시거소를 제공하려는 사업임.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해외위난동포지원	-	40	100	100	60	150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계기로 취약 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2024년에 최초로 편성한 예산으로, 2024년 9월 기준 집행 내역은 없음.

동 예산은 해외위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2025년 예산안은 일반 수용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음.

< 해외위난동포지원 예산 산출근거>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0.1백만×구호물품 400세트=40백만	0.13백만×구호물품 500세트=65백만 0.7백만×50가구×1개월=35백만
40백만원	100백만원

재외동포청은 2024년 청 출범 후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 증가에 따라 동 사업을 신설하고,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

동 지침에 따르면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은 원칙적으로 해외위난 발생시 이에 대응하고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자력구제 노력이 선행됨을 조건으로 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과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해외위난의 심각성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재외동포청장 직권으로 지원을 시행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상황 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지원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예산의 집행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바, 이는 해외위난 재외동포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해외위난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절차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재외동포사회의 자발적 자력구제 노력과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과 주재국 정부의 지원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엄격한 요건 상 해외위난 상황의 동포에게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임.

동 예산은 해외위난 상황의 동포에게 인도적 차원의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위기 상황 극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해외위난 상황의 동포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보다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동포간담회 개최

동 사업은 정상 및 총리의 해외 방문 계기에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임.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동포간담회 개최	-	-	1,750	1,750	1,750	순증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외교부 '정상·총리 외교' 사업비의 일부를 이관하여 재외동포청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2025년 예산안은 1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포간담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방안 마련 필요

동포간담회 개최는 2025년 정상 및 총리의 외교 일정에 연계하여 추진하므로 정상 동포간담회 11회를 기준으로 15억 2,300만원, 총리 동포간담회 4회를 기준으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일반수용비 2억 3,300만원, 임차료 10억 6,000만원, 일반용역비 2억 3천만원, 국외업무여비 1억 5,300만원, 사업추진비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포간담회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사업	산출비목	금액	소계
■ 정상 동포간담회	일반수용비	166.8	1,523
	공공요금 및 제세	3.2	
	임차료	1,010	
	일반용역비	140	
	국외업무여비	138	
	사업추진비	65	
■ 총리 동포간담회	일반수용비	66.2	227
	공공요금 및 제세	0.8	
	임차료	50	
	일반용역비	90	
	국외업무여비	15	
	사업추진비	5	
합계			1,750

2024년도까지 동포간담회는 외교부 사업인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의 일부로 진행됨. 2024년도에 확정된 외교부 예산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시 '동포간담회 등 개최 및 주재국 업무협약(공관)' 예산으로 11회 기준 업무추진비 5억 7,200만원이, 총리 순방 시 같은 항목의 예산으로 2회 기준 업무추진비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포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별·분야별·세대별 재외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동포사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재외동포청이 이를 주관할 필요가 있음.

다만 외교부 사업인 정상 및 총리의 해외순방 일정 중 동포간담회만을 별도로 재외동포청이 담당하는 것은, 정상 및 총리의 해외 방문 때마다 동포간담회만을 별도로 준비하기 위해 답사단, 선발대, 본대 등 출장 준비를 하여야 하고 현지 행사 준비를 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임. 더욱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동포청 업무 담당 공무원 및 행정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동포청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정상 및 총리 방문 계기 동포간담회 추진주체인 재외동포청은 인력보강,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동포간담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동 사업은 재외 한글학교의 교육역량 강화,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한글학교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외동포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226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17,268	22,194	22,652	22,652	458	2.1

□ 모국문화 보급사업의 추가 활용방안 모색

동 사업은 모국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모국과의 연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통 의상·악기, 사물놀이용품 등 전통 문화용품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및 시상을 통해 모국 문화를 보급하려는 사업임.

2025년도 예산안에 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 전통문화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전통문화용품 심사 등 2회를 위해 일반수용비 2,000만원과 전통문화용품 물품 구매 및 배송을 위해 일반용역비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모국문화 보급사업	260	242	242	242	-	-

전통문화용품 지원사업은 각 공관에서 재외동포단체(문화단체, 한인회, 한글학교 등)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전통악기, 전통의상, 민속놀이용품, 기타 전통문화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3년도에는 48개국 99개 단체에 327개 물품을 지원하였음.

전세계 재외동포단체에 전통문화용품을 지원하여 모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은 의미를 가진다고 보임.

다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모국 문화의 보급이 재외동포사회에 민속 놀이세트나 사물놀이 세트 등 전통문화용품을 단순 전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도 함께 모색·제시하여 현지 외국인들과 이를 함께 활용한다면 재외동포사회를 통해 해외 각국에 한국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재외동포사회에 전통문화용품을 단순 보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지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제시할 필요가 있음.

마.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동 사업은 차세대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한인 위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동포사회와의 협업체계를 구축,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하고 해외에 전파하는 사업임.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	310	200	131	△179	△57.7

동 사업은 2024년에는 ‘미주유럽동포 정책 강화’내 내역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부터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2024년(3억 1,000만원) 보다 1억 7,900만원이 감액된 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사업의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과 통합 추진 검토

동 사업을 위하여 2025년도에는 콘텐츠 개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용역비 4천만원,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 사업추진비 1,500만원, 정책연구비 3,100만원 등 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차세대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예산 산출근거 >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 일반수용비 : 41백만원 - 콘텐츠 연구 : 20,500,000원*2회=41백만원 ■ 일반용역비 : 50백만원 - 콘텐츠 개발 관련 세미나 : 50,000,000원*1회=5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140백만원 - 동포사회·한글학교·전파 국외 강연·간담회 개최 : 14,000,000*10개국=140백만원 ■ 사업추진비 : 39백만원 - 동포사회·한글학교·전파 국외 강연·간담회 개최 : 3,900,000*10개국=39백만원 ■ 정책연구비 : 40백만원 - 콘텐츠 연구 : 20,000,000원*2회=40백만원	■ 일반용역비 : 40백만원 - 콘텐츠 개발 관련 세미나 : 40,000,000원*1회=40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45백만원 - 콘텐츠 개발 관련 세미나 : 5,000,000원*3명*3회=45백만원 ■ 사업추진비 : 39백만원 - 콘텐츠 개발 관련 세미나 : 15,000,000원*1회=15백만원 ■ 정책연구비 : 31백만원 - 콘텐츠 연구 : 31,000,000원*1회=31백만원
310백만원	131백만원

동 사업은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를 반영하여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교육하고자 2024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임.

2024년도에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에 한국 발전상을 수록하여 전세계 한글학교에서 차세대동포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인 바, 2024년도 9월 기준 초등 고학년용 한국어 교재를 개발 중임.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에서 교육자료 지원, 모국문화 보급사업 등으로 시행 중이며,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나 교재를 이미 교육부로부터 제작·지원받고 있고, 독립기념관, 세종학당재단, 국립고궁박물관 등 유관기관에서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음.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세부사업명을 분리하여 한국발전상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미나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임.

재외동포 한국어 교재 제작 · 지원은 별도 사업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의 교육자료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바.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동 사업은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40억 300만원이 증액된 27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인건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49억 9,000만원과 사업출연금 227억 6,700만원이 편성됨.

재외동포지원센터의 사업은 차세대 육성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동포지원사업, 민족교육 육성, 기록전시운영,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통합네트워크 지원, 인건비, 경상비 등 9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18,321	23,754	27,757	27,757	4,003	16.9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차질 없는 재추진 필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차세대동포 정체성 함양 및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재외동포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공사비 72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99억 7,400만원으로 국고 투입 252억 5,300만원, 동포기부금 47억 2,100만원으로 구성됨. 국고 투입금 중 2021년, 2022년 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및 건축비 총 84억 5,600만원 중 6억 4,700만원을 집행하여 78억 900만원은 2024년까지 재이월, 재재이월되었고, 2023년, 2024년 예산액은 미편성되었다가 2025년 공사비 72억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5년도에 실시설계의 완료, 공사입찰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이월된 금액 중 설계비 6억 2,3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등 71억 8,600만원은 2025년으로 다시 이월 될 것이 예상됨. 이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 예산 현액은 약 143억 8,900만원임.

< 총사업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비목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건설보상비	4,721	2,767	-	-	-	-	1,954
설계비	1,483	1,270	-	-	-	-	213
공사비	22,241	-	5,749	-	-	7,203	9,289
감리비, 시설부대비	1,529	-	1,437	-	-	-	92
합계	29,974	4,037	7,186	-	-	7,203	11,548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는 2020년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 마곡부지에 2023년 건립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매매계약 불가 통보에 따른 대상지 재선정, 재외동포청의 개청에 따른 사업 이관 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현재 경기도 시흥시의 서울대학교 MI 부지에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음. 공사 지연에 따라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발생한 공사비 인상으로 당초 예산액에 맞추어 건립규모를 축소하였음.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계획 변경 개요 >

구분	당초 계획(2023년 완공 예정)	변경 계획(2026년 완공 예정)
건립대상지	마곡지구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총사업비	29,974 백만원	좌동
규모	연면적 7,800㎡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6,758㎡ 지하 1층, 지상 5층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확대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간 교류 증진 등에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며, 더욱이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재외동포의 기부금 조성을 통하여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할에 대한 동포사회의 염원이 담겨 있음.

재외동포청은 교육문화건립센터가 목표 시점에 준공 완료되어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동 사업은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세대별·분야별 재외동포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동포단체 활성화, 재외동포의 전략적 정책공공 외교 활동 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K-타운 활성화 지원, 세계한인회장 대회, 세계한인의날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6,048	6,549	7,066	5,896	△653	△10.0

동 사업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300만원이 감소한 5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4년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편성되었던 조사연구활동 지원 예산 1억 300만원, 한국어뉴스세계위성망구축사업 예산 9천만원, 동포보듬기 사업 예산 8억원이 다른 내역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의 사유에 기인한 것임.

□ 동포단체 활성화 및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예산의 집행 기준 정비 필요

동포단체 활성화 예산은 한인회, 문화예술단체, 차세대단체, 경제단체, 언론단체 등 재외동포단체의 거주국 내 권익향상, 동포사회 결속력 강화,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이주 기념사업 지원으로 동포사회 사기 진작 및 화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1억 5천만원을 편성함.

한편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예산은 거주국 내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 및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회·관련 단체 등의 공공외교활동 지원, 현지 취약계층 지원과 주재국 정부 주최 행사 참가 등을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 김치의 날 등 현지 기념일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8억 9,300만원을 편성함.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은 동포사회의 사기 진작 및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동포단체 활동 지원사업이고,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예산은 거주국 내 동포사회의 위상 강화 및 정치력 신장을 위한 한인회 등 관련 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 김치 축제와 같은 한인회의 ‘김치공공외교’ 활동 지원은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동포단체 활성화 예산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고, 3.1절 기념행사의 경우 동포

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미주한인의 날 기념식은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사업으로 집행되는 등 구분 없이 집행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재외동포청은 2024년도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2억 3천만원이 삭감되어 2023년도 수준의 예산 회복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음.

< 최근 3년간 재외동포 공공외교 활동지원 실적 >

구분	지원 내역	지원액(단위 : USD)
2022	98개 사업	488,099
2023	169개 사업	680,500
2024	93개 사업	426,350

예산 증액을 통해 동포단체에 대한 지원금 지급 사업 건수를 확대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예산 편성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 집행 후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동 사업은 모국 초청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차세대 인재 발굴, 주류사회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와 모국 간 유대 강화 및 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 차세대대회, 입양동포 네트워크 지원,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구축	1,619	1,610	1,613	1,340	△270	△16.8

동 사업은 2024년 예산 대비 2억 7천만원이 감액된 13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은 차세대 재외동포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외동포 청년에게 재외공관 단기 인턴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서는 2024년 예산 대비 2억원이 감액된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20세~34세 차세대 재외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재외공관 단기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2024년도 시행 결과 재외공관 수요조사에서 22개 공관, 인턴 25명 수요를 파악하여 재외공관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인턴대상자를 모집, 선발하고 정부, 경제, 영사서비스, 홍보문화 등의 공관의 업무 상황에 따른 과업을 부여함.

< 2024년도 재외공관 청년인턴 수요조사 결과 >

수요조사 기간	2024. 1. 12. ~ 1. 22.			
수요조사 대상	50개 재외공관(재외동포 15,000명 이상 거주 관할공관 대상)			
회신 공관	22개 공관, 25명 수요 파악			
	국가	공관	소요인원(명)	비고
	미국	주뉴욕(총), 주LA(총), 주휴스턴(총), 주보스턴(총)	4	
	일본	주일본(대), 주오사카(총)	4	각2명
	러시아	주러시아(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총)	2	
	캐나다	주토론토(총), 주밴쿠버(총)	2	
	호주	주호주(대), 주시드니(총), 주멜번(분)	3	
	카자흐스탄	주카자흐스탄(대), 주알마티(총)	3	알마티(2)
	독일	주프랑크푸르트(총)	1	
	브라질	주상파울루(총)	1	
	뉴질랜드	주오클랜드(분)	1	
	프랑스	주프랑스(대)	1	
	인도네시아	주인도네시아(대)	1	
	태국	주태국(대)	1	
	키르기즈(공)	주키르기즈공화국(대)	1	
	합계		25	

근무형태	주 2회 2시간(1개 공관), 주 2회 4시간(2개 공관), 주 2회 8시간(1개 공관), 주 5회 4시간(1개 공관), 주 5회 6시간(6개 공관), 주 5회 8시간(10개 공관)
과업부여	정무(2개 공관), 경제(1개 공관), 영사서비스(11개 공관), 홍보문화(5개 공관), 기타 (3개 공관)

청년인턴은 재외공관별로 자체적으로 선발하되 재외동포청에서는 인턴십 대상자에 대한 보수를 재외공관으로 일괄 교부하면 공관에서 월별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함. 구체적 산출 내역을 보면 인턴 1인당 임금은 154만원이고, 인턴 1인당 선발 교육, 관리비로 104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동 사업은 거주국과 모국 간 가교로서의 재외동포 청년의 역량강화 필요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만, 주2회 2시간 혹은 주2회 4시간의 6개월 이내 인턴십 기간, 기밀성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공관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부여할 수 있는 업무의 제한 등 한계가 있음. 또한 짧은 인턴십 기간에 비해 인턴대상자 모집과 선발, 사전교육 실시, 월·중간·최종 평가 실시, 사업 완료 후에는 재외동포청으로 사업 시행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등 행정적 비효율 뿐 아니라 청년 인턴 보수에 준하는 관리비가 소요됨.

근무시간이나 기간의 적절성, 인턴 수행 업무의 내용 등을 점검하여 재외공관의 업무 경감과 재외동포 청년의 경력 등에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의 개선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동 사업은 원폭 피해 동포, 사할린동포, 고려인동포, 다문화 취약 동포, 파독광부·간호사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 취약 동포 지원을 통해 국격에 걸맞게 동포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일민단 지원,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 다문화 취약동포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취약동포 보듬기 등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8,576	8,892	9,969	9,969	1,077	12.1

동 사업은 2024년 예산 대비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99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다문화취약동포 지원사업의 여성가족부 사업과 차별화된 추진 필요

동 사업은 동남아 거주 다문화 취약동포의 안정적 현지 정착 및 정체성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6천만원이 감액된 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5년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내역
2019	205	178
2020	300	175
2021	300	236
2022	300	174
2023	300	162
2024.9 기준	206	112

이혼이나 별거 등의 사유로 베트남인 어머니를 따라 베트남으로 동반 귀국한 한국국적 자녀의 현지 적응·정착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주무부처: 여가부)’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2019년부터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국적자녀 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음. 동 사업은 베트남 귀환여성 및 한국국적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학업·의료 상담, 자녀 돌봄, 한글·정체성 교육 등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보조사업으로 베트남 남부 켄터 지역의 한베돌봄센터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불허하여 베트남 귀환여성의 한국국적 자녀의 현지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고, 또한 이를 통해 해

당 자녀의 한민족 정체성 확립 및 모국과의 연계를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다문화가족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사실상 지원대상이나 추진 방식 등이 거의 유사하고 지원지역만을 달리하는 ‘국외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족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나 베트남 등 현지로 귀환 후에는 한국 국적인 해당 자녀에 대한 지원은 재외동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이 더 효율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임.

< 재외동포청과 여성가족부 지원사항 비교 >

	재외동포청	여성가족부
지원기관	베트남 남부 한베돌봄센터(껀터 지역)	베트남 북부 한베돌봄센터(하이퐁 지역)
지원대상	한-베 자녀	한-베 자녀, 귀환 결혼이민자 등
주요내용	-한-베 자녀의 안정적 현지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및 구조활동 -한-베 자녀 정체성 정립을 위한 현지 한글캠프 운영, 한국어 교육 지원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기타 한-베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돌봄사업과 활동 등	-귀환 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환 결혼이민자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 -사업지역 확장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재외동포청은 여성가족부와 지원국, 지원대상, 기준 등을 협의하여 중복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재외동포지원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재외동포인 베트남 등 현지로 귀환한 한국국적 자녀에 대한 일관성있고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취약동포 보듬기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 편성 필요

소외동포지원사업은 강제동원·이주 등 역사적 배경으로 어려움을 겪은 재외동포와 그동안 정부지원에서 다소 소외된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에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에는 '역사적 특수동포 및 소외동포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6,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동 사업의 경우 2023년도의 경우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원폭 피해 동포 초청 사업에 4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800만원으로 '재외동포 청년 한국이해과정' 및 '동남아 다문화 가족 모국방문 사업'을 실시하였음.

2025년도 예산안은 고려인 및 소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국방문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따라 편성되었음.

그러나 재외동포 청(소)년의 모국 방문 및 교육 실시 사업은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와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재외동포청은 사업계획 수립시 그 대상 및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와 효율적인 업무 분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동포보듬기 사업의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정립하여 소외된 동포에 대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차.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동 사업은 국내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국내동포 관련 단체 지원 등 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됨.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243	551	1,096	1,096	545	98.9

동 사업 2025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0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사업은 국내동포 맞춤형 적응교육 지원 및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 수행을 통해 재외동포청 주도의 체계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10억 4,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음

동 사업은 「재외동포기본법」²⁴⁾ 제정으로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업무가 재외동포청의 업무에 포함됨에 따라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지속 관리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6억 9천만원, 연령별 동포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산 3억 5,500만원만원을 편성하였음.

< 재외동포 국내동포 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 (2024년도 예산) 0 → (2025년도 예산안) 1,045백만원, 순증
•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 ('24) 0 → ('25요구) 690백만원, 순증
- (산출) 상반기 지자체 보조 10개소×92백만원×보조율 50%=460백만원
하반기 지자체 보조 8개소×56.5백만원×보조율 50%=226백만원
심의위원 수고료 등 기타비용 4회×1백만원=4백만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4) 0 → ('25요구) 355백만원, 순증
- (산출) 교육프로그램 개발 1식×200백만원=200백만원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 3회×50백만원=150백만원
조달수수료 등 기타비용 5회×1백만원=5백만원

24)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제3조(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④ 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함.

그러나 국내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타부처나 지자체의 사업 및 지원 현황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며,²⁵⁾ 일부 신청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배분하는 사업 방식은 국내 정착을 위한 사전준비부터 지속관리까지 재외동포청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보기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임.

25) 국내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지원(재외동포청, 2024. 10. 기준 파악현황)

- (경기도) 고려인주민 정착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지역외국인 편의증진 사업
- (광주광역시) 고려인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지원
-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 (안산시) 안산시 고려인주민문화센터 운영
- (안성시) 이주민 한글교실 운영(고려인가족을 위한 한국어초급반 운영) 등

2. 인건비

2025년도 재외동포청 인건비 예산은 전년대비 25억 700만원이 감액된 102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본예산(A)	2025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인건비	3,059	12,721	13,611	10,214	△2,507	△19.7

□ 재외공관에 동포 업무 전담 인력 필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재외공관에는 단 한명의 동포 업무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임.

구 재외동포재단 시절 LA, 일본, 중국, 뉴욕, 시드니, 알마티, 호치민 등 7개 재외공관에 동포 업무 전담 인력을 파견해왔으나,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전원 철수²⁶⁾하여 동포사회의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동포 최대 거주 지역인 LA총영사관, 주일본대사관, 주중국대사관의 경우라도 우선적으로 동포 업무 전담인력의 파견이 시급하여, 파견 인원을 정원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 기

26) 호치민은 2024년 11월 철수 예정

존 정원을 활용한 직무파견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함.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와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2025년에는 파견이 불가능한 상황임.

재외동포 최대 거주 지역의 재외공관에라도 우선적으로 동포 업무 전담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IV. 소수의견의 요지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없음.

2. 재외동포청 소관

- 없음.

V. 부대의견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5년 신규 반영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거주 편차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추진시 통일부 및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하도록 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임에 근거하여 ‘통일 여론분석 보고서’로 변경된 여론분석 업무를 ‘평화통일 여론분석 보고서’로 복원하고, ‘통일 여론분석 보고서’의 발간과 배포에 치중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론 수렴과 심층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청은 공보·홍보 역량강화(7121-301) 사업 내 ‘재외동포와의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이 현행 단년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송출을 보장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의 중복 지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별첨

2025년도 예산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 등 예비심사결과

I.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명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일반회계	—	—	—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	—	—
	통일부	일반회계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반회계	—	—	—
	합 계		—	—	—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외교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일반회계	3,351	-	3,351
	재외동포청	일반회계	13,598	-	13,598
	합 계		16,949		16,949

II.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1	자문회의 운영 (1031-300)	4,530	4,054	4,686	632	○ 내역사업인 ‘국내·해외출범회의’ (20억 4,100만원, 전년 대비 8억 2,800만원 감액)는 법정회의인 국내·국외출범회의 개최를 위한 사업임. ○ 내내역사업인 ‘국내 출범회의’ (11억 8,800만원, 격년사업으로 2전년 대비 6,200만원 감액)는 민주평통자문회의의장 참석 하에 국내 출범을 선포하기 위한 사업으로, ○ 국내 출범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 출석수당 신설 및 여비 현실화, 임차료·용역비 현실화,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예산 반영 등을 위해 6억 3,200만원 증액
2	자문위원 역량강화 (1131-300)	2,589	2,359	2,423	64	○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5억 9,100만원, 전년 대비 6,400만원 감액)은 청년·여성층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청년·여성위원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통일 이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 축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6,400만원 증액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 이유
3	지역협의회 운영 (1131-301)	12,265	13,239	14,016	777	○ 내역사업인 ‘협의회 운영비’ (33억 7,500만원, 전년 대비 4억 800만원 증액)은 지역조직인 국내외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 중 국내 협의회 운영비가 2023년 대비 10% 감액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바, 공공요금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7억 7,700만원 증액
4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131-302)	5,698	6,174	8,052	1,878	○ 내역사업인 ‘지역통일활동 지원’ (45억 2,300만원, 전년 대비 9억 6,800만원 증액)은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연대 확대를 통해 통일활동을 하는 사업임. ○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지역회의·협의회 개소당 사업 단가 상향(16억 7,800만원)하고 워크숍·평가회 등(2억원)을 위해 18억 7,800만원 증액

나. 재외동포청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1	재외동포협력 센터 출연 (5032-303)	23,754	27,757	28,751	198	○ ‘동포지원사업(6억 3,000만원, 전년 대비 29억 5,000만원 감액)’ 중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사업의 참가자 확대 및 실소요 예산을 반영하여 1억 9,800만원 증액
					250	○ ‘동포지원사업(6억 3,000만원, 전년 대비 29억 5,000만원 감액)’ 중 정체성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은 2024년 동포 사회 등을 통해 처음 모집한 차세대동포 씨포터즈의 쌍방향 소통활동 지속시행을 위해 2억 5,000만원 증액
					546	○ ‘재외동포 장학사업’ (40억 7,400만원, 전년 대비 5억 4,600만원 감액)은 2024년 수준의 장학인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4억 6,600만원 및 중국·CIS 현지 장학금 지원사업 8,000만원 등 5억 4,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2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5034-301)	6,549	5,896	7,800	1,147	○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31억 5,000만원, 전년 대비 동액)은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를 지원하여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억 4,700만원 증액 - 경제·의료·법률 등 전문 분야의 동포 단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5억 8,700만원 - 멕시코 120주년, 아르헨티나·파라과이 60주년 한인 이주 기념 사업: 1억 5,000만원 - 국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동포 경제단체 지원: 4억 1,000만원
					757	○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31억 5,000만원, 전년 대비 동액)은 재외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과 집중 지원을 위하여 7억 5,7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3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5036-302)	11,657	6,253	14,220	1,678	○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22억 1,200만원, 전년 대비 21억 3,300만원 감액)은 2025년 예산안에 재외 국민 민간 인증서 발급 운영비 일부(5개월)만 반영되어 있어 서비스 정상운동을 위해 16억 7,800만원 증액
					480	○ 민간 클라우드 기반 e-아포스티유 화상 영사 서비스를 구축했으나 클라우드 사용료가 미반영되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사업운영 일반’ (3억 7,600만원, 전년 대비 1억 5,500만원 감액)에 4억 8,000만원 증액
					217	○ ‘영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36억 6,500만원, 전년 대비 6억 3,700만원 감액)에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 신규시스템 유지보수비 미반영되어 2억 1,700만원 증액
					188	○ 2025년 예산 미반영 ‘비대면·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확대사업(0원, 전년 대비 12억 3,900만원 감액)’에 병역·보훈·금융·기타 제증명 등 신규 서비스 확대를 위해 1억 8,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 이유
4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5036-304)	551	1,096	2,656	1,56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 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우 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긴급 생계비 지원’ (신규) 15 억 6,000만원 증액
5	인건비 (7101-101)	12,721	10,214	10,491	277	○ 미국, 일본, 중국 3개 공관에 재외동포청 정원을 활용한 직무파견 관련 수당 반영하여 ‘인건비’ 2억 7,700만원 증액
6	기관운영 기본경비 (7111-251)	2,777	2,374	2,784	410	○ 미국, 일본, 중국 3개 공관에 재외동포청 정원을 활용한 직무파견 관련 경비 반영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 4억 1,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4 본예산	2025(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7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 (7121-303)	2,334	1,900	7,790	5,890	○ ‘정보보안 체계 강화 사업(신규)’은 외교·안보 부처에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 센터 운영 시스템에 대한 정보 보안·관제시스템을 조속 히 구축할 필요가 있어 58억 9,000만원 증액

Ⅲ.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 없음

IV. 부대의견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5년 신규 반영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거주 편차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 추진시 통일부 및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하도록 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임에 근거하여 ‘통일 여론분석 보고서’로 변경된 여론분석 업무를 ‘평화통일 여론분석 보고서’로 복원하고, ‘통일 여론분석 보고서’의 발간과 배포에 치중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론 수렴과 심층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나.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청은 공보·홍보 역량강화(7121-301) 사업 내 ‘재외동포와의 소통플랫폼 구축사업’이 현행 단년계약방식 변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송출을 보장하고 인프라 구축 비용의 중복 지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